

한반도 동향

2023년 5월

- I. 한반도 일지
-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 1. 대 내
 - 2. 대 외

편집책임	장철운 통일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김세라 경영지원실 연구원
작성 자	권주현 북한연구실 연구원 김아영 인도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용혜민 평화연구실 연구원 탁민지 기획조정실 연구원	안정은 기획조정실 연구원 윤훈희 인도협력연구실 전문연구원

이 달의 주요 동향

한국

尹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 호주, 베트남, 인도, 우크라이나 등과 정상회담
방한한 캐나다·독일·EU 등과 각각 정상회담 ... 日 후쿠시마에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

북한

김정은, 정찰위성발사 준비사업 현지지도 ... 국가우주개발국,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발표
당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6월 소집 결정 ... 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미국

G7 정상회의 계기 우크라이나와 정상회담 ... “추가 군사지원” 약속
日과 교육협력각서 체결 ... 하원, 대만과 5억 달러 규모 무기지원 계획 논의

중국

중양아시아 5개국과 정상회의 시안에서 개최 ... 美 마이크론社 반도체 제재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 확보 ...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독일, 프랑스 등과 외교장관 회담

러시아

오바마 포함 500명 러시아 입국 금지 등 대미 보복 제재 단행
연해주 지역에서 中과 경제협력 가속 ... 러시아 총리 방중 및 시진핑 中주석 접견

일본

기시다 총리, 방한해尹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 “韓 시찰단 파견 수용”
기시다 총리, 신문 인터뷰에서 개헌 의지 강조 ... G7 정상회의, 히로시마에서 개최

I

한반도 일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4.26.)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주의법무생활 강화에 모범적인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 칭호 수여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업그레이드되고 확장된 한·미동맹,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어야”(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어...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돼야” • 박진 외교부 장관, “尹 대통령 방미는 특정국 겨냥 아냐...中, 과잉대응할 필요 없어”(한국언론진흥재단 포럼 질의응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정상회담 관련) 새로운 한·미 동맹의 발전과 그 청사진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분이 대화한 것” - “국제사회의 보편적 관심 사항과 보편적인 원칙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것” - “北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위협적인 도발을 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때 과연 中의 국익에 도움이 되겠는지 거꾸로 中에 묻고 싶어” - “(시진핑 주석 방한 관련) 양국이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 주석 방한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현실화하길 기대하는 입장” -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양국 간 핵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해법으로 정부는 판단” • 이종섭 국방부 장관, “워싱턴 선언,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역제력 획기적 향상”(매일경제신문 기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선언은 재래식 무기를 기반으로 한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핵을 포함한 상호방위 개념으로의 업그레이드” - “(NCG 신설 관련) 핵무기를 포함한 모든 군사력을 활용해 정보 공유·협의·기획과 실행 등 확장억제 전반에 있어 韓과 함께한다는 약속” - “美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가시화함으로써 핵전력이 상시 배치되는 수준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조치” - “현시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안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이고 우리 군의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 • 장호진 외교부 제1차관, 방한한 美 하원 의원단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번 뷰캐넌 美 하원 민주주의 파트너십 의장을 비롯한 하원의원 8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국빈방미 결과 및 한·미동맹 70주년, 韓 관련 주요 입법, 한반도 및 역내·글로벌 정세에 대해 의견 교환 - 장호진 차관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北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한·미 공조를 재확인 하였으며, 워싱턴 선언 발표를 통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날로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고, 양국의 북핵 공조에 대한 美 의회의 변함없는 지지를 당부 - 의원단은 역내외 복합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 美 의회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초당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 (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정례브리핑, “억제력 강화 조치 필요” … ‘워싱턴 선언’ 北·中 반발 일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선언에 대한 북한의 반발 관련 중요한 점은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태평양 및 그 너머의 지역에서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유지하는 강력하고 깊이 통합된 한·미동맹의 공동비전을 밝혔다는 것 - 또한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진전시키려는 북한의 노력과 안정을 해치는 위험한 수사에는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신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믿고 있으며, 이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다고 답변 - 이어 워싱턴 선언에서 분명하게 밝힌 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 목표하에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도 계속 추구하고 있다고 부연 • 연방기관, “북·중·러 등 17개국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지정 권고” 연례보고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 연례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포함해 17개 국가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미국 정부에 권고 - 이어 “이들 정부가 종교 및 신앙의 자유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심각한 침해에 관여하거나 옹인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2년에도 북한의 종교 상황은 여전히 세계 최악이었다”고 평가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안보보좌관·日 집권당 간사장 회동 … “韓 등과 역내협력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자민당 간사장, 역내 안보 환경과 미·일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 - 양측은 미·일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인 침공을 방어하는 우크라이나를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는 결의를 확인했으며 한국을 포함한 역내 전반에 걸친 다자 간 협력 증대의 중요성을 논의
5. 2. (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1절 기념 당·정 간부들의 근로자 축하격려 방문(5.1.)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최룡해(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 포함 당·정 간부들, 금성 트랙토르 공장·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평양 화력발전소·평양 화성지구 2단계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자 등에서 근로자 축하격려 • 5·1절 기념 《금속공업 부문 노동자체육경기-2023》 결승경기 진행(김일성경기장)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및 당·정·군 간부들 관람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北 UN 안보리 결의 위반에 中이 제재 동참을 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기자 오찬 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가 워싱턴 선언에서 핵 기반으로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대해 이익을 제기하고 비판하려면 핵 위협을 줄여주든가 적어도 핵 위협을 가하는 데 대한 안보리 제재라는 국제법은 지켜줘야” - “中이 우리한테 적대행위만 안 하면, 서로 계약을 정확히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고, 상호 존중하면 중과 얼마든지 경제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어” • 박진 외교부 장관, 말레이시아 총리 예방 및 외교장관회담 개최(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와르 빈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예방 및 잠브리 빈 압둘 카디르 외교장관과 ‘한-말레이시아 동방정책 40주년’을 주제로 양자회담 개최 - 박진 외교부 장관, “양국이 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최적의 파트너로서 지난 60여 년 동안 다방면에서 견고한 협력관계를 발전” - 박진 장관,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구체적 내용도 마련,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아세안과의 호혜적·포괄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필요” - 박진 장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양국이 금년 중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 대화」 신설을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을 기쁘게 생각”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 (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 △핵심 원자재 협력 업무협정(MoU) 체결 △할랄 한우 수출 △주코타키나발루분관 공식 개소 - 양국 장관은 최근 北의 잇따른 도발이 한반도와 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데 공감 • 외교부, “北, 한·미 핵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도발과 긴장 격화의 명분으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워싱턴 선언은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北 핵사용을 억제해서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지역과 세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 “모든 책임은 불법적인 도발과 무모한 핵 개발을 자행하는 北에 있어” - “한·일·중 3국 간 협력은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만큼, 우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가급적 연내 3국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관련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예정” • 신범철 국방부 차관, “한·미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는 ‘최상의 체제”(KBS 라디오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확산방지조약(NPT)에 가입한 이후 국제사회에 독자적 핵무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韓 경제의 특성상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지 않으면서 北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방식이 美와 확장억제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
	미·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호주 제5차 에너지안보대화(4.25.~27.) 개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무부 에너지 자원국(ENR)과 에너지부(DOE)는 4월 25일부터 27일까지 워싱턴 D.C.에 호주대표단을 초청하여 제5차 에너지안보대화를 진행 - 양측은 수소를 포함한 청정 에너지 공급망, 중요 광물, 에너지 안보 문제 및 청정 에너지 기술에 대한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차기 회의는 2024년 호주에서 개최 예정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강 외교부장 미얀마 방문, 미얀마 총리 및 외교장관과 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미얀마의 정치전환과정을 지속적으로 돕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미얀마의 모든 정당이 다름을 인정하고 화해할 수 있기를 도울 것...중국-미얀마 경제회랑 사업을 포함하여 미얀마의 농업·교육·의료 등 주요 협력 과제들을 강화할 것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韓 국회의원 독도 방문 관련, 日 외무성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아시아태평양주국장이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차석공사에, 주한일본대사관 차석공사가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 각각 항의
5. 3. (수)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평안남도·자강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주시, 개천시, 구장군, 향산군, 송원군, 전천군 등 여러 시·군 농장 및 묘향산의료 기구공장, 희천발전소, 희천정밀기계공장, 개천시·송원군·전천군의 학생 교복의 질 보장상태, 강계시 도시경영사업 등 현지요해 - 화성거리 새집에 입사한 근로자·가정 방문 및 축하 • 청년학생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5.2., 신천박물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철(청년동맹 중앙위원장), 박태섭(황해남도 당위원회 비서), 관계 부문 일꾼들, 청년동맹 일꾼 및 청년학생들 참가 -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미 행동을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이며 굴욕적인 대미 굴종행각, 핵전쟁 행각”으로 낙인 - 침략자·도발자들의 허수아비를 불사르는 화형식 진행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3.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ADB 회원국과 함께 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갈 것”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공급망 분절, 디지털 격차 해소와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새로운 도전은 국가 간 견고한 연대와 협력 필요” - “韓은 ADB 회원국들과 함께 아시아, 인도-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 나가” • 권영세 통일부 장관, “北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심포지엄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 당국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한 동포이자 통일의 동반자인 우리가 이러한 北 주민의 고통을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어” - “尹 정부는 정치·군사적 상황과 관계없이 北 주민의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 -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시급한 보건의료 분야의 남북 협력만큼은 北 당국도 하루빨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할 것” • 외교부, ‘韓 국회의원 독도방문’ 日 항의에 “부당한 주장 일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어” • 통일부, 「신통일미래구상」에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 비전 반영(통일부-통일미래기획위원회 원탁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장관 참석 하,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마련한 (가칭)「신통일미래구상」 초안에 대해 논의 - 권영세 장관, “(가칭)「신통일미래구상」이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북한의 핵 고도화 상황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구상 △20~30년 지속가능한 “오랜 생명력을 가지는” 구상 △“국민과 세계가 힘을 모아주는” 구상이 되어야” -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3대 과제로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체계적인 통일미래 준비를 제시 -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명시된 “한반도의 모든 구성원을 위한 더 나은 미래”와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구상안에 반영 - △통일지향적 공존관계 정립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정착 △인권 등 보편가치 구현 △상생의 협력구조 정착 △개방과 소통의 열린 한반도 △동북아 평화·번영의 선도적 역할 등을 검토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회’의 면담 관련 발표할 것이 없으며, 불법 구금과 납치를 포함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언급 - 또한 한국 및 일본을 비롯해 동맹과 긴밀한 협력을 할 것이라고 부연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총리, 산케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헌 의지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민당이 목표로 하는 개헌 방향인 △ 자위대 명기, △ 긴급사태조항, △ 참의원 선거의 선거구 합병 해소, △ 충실한 교육환경 조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 노력할 것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3. (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내년 인태지역에 최신 호위함 파견해 유엔 대북 금수조치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 크리스티안 카크 독일 해군참모총장, 국제해양안보회의(IMSC)에서 “내년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 호위함과 전투지원함을 배치할 것”이라고 언급 - 카크 총장은 “이번 배치의 목표는 독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규칙 기반 질서와 항해의 자유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상감시 작전을 통한 유엔의 대북 금수조치도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태평양 안보해양교류(PSMX) 내 우리의 상황인식과 유엔의 대북 금수조치 핵심 요소들에 기여를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 - PSMX는 북한의 유엔 제재 회피를 막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미국이 설립한 연합체로 독일과 한국을 비롯해 호주, 캐나다,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영국이 참여
5. 4. (목)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계급·직맹원들의 성토모임 진행(5.3., 개성시)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인철(직종 중앙위원장), 김금룡(개성시 당위원회 비서), 직맹일꾼 및 개성시 노동계급과 직맹원 참가 - “핵전쟁 흥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내 놓은 미제 침략자”와 “남조선을 미국의 핵전쟁 화약고, 전초기지로 전락시킨” 윤석열 정부를 규탄 • 여맹일꾼·여맹원들의 복수결의모임 진행(5.3., 중앙계급교양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순(여맹 중앙위원장), 여맹일꾼, 평양시 여맹원 참가 - 미국이 “우리 국가를 절멸시킬 흥계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을 비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상전과 야합하여 가장 적대적이고 침략적인 핵전쟁 모락을 꾸민 괴리역도놈”이자 “민족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특등 친미주구, 만고의 역적”라고 규탄 •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 창립 50주년 기념보고회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현철(당중앙위 비서), 기업소 노동자·기술자·일꾼들에게 보내는 당중앙위 축하문 전달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北 한·미 정상 화형식 보도에 대해 매우 유감”(통일부 관계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합의를 반영한 워싱턴 선언에 대해 北이 다양한 방식으로 불만을 표출” - “외부의 위협을 과장함으로써 주민 통제에 활용하려는 선전적 성격도 있는 것” • 조현동 주미대사, “워싱턴 선언은 한·미 상호방위조약 업그레이드”(CSIS 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각에서 NATO의 핵 공유와 비교하지만, 1953년 체결된 상호 방위 조약의 진화로운 다른 나라와 비교할 필요 없어”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인스 국가정보국(DNI) 국장, “中 침공해 대만 반도체 끊기면 연간 1조 달러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헤인스 국장,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TSMC의 반도체 생산이 중단되면서 “세계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영향이 첫 몇 년 동안은 연간 6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이어 헤인스 국장은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냐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의 질문에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뿐 아니라 중요한 네트워크에 사이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답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청나라 때 러시아에게 뺏긴 블라디보스토크 항구 사용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해관총서, “지린성 국내 무역 화물의 국경 간 운송업무 범위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항구를 ‘경유 항구’로 신규 추가한다”며 “동북 노후 공업기지 진흥전략을 실현하고, 해외 항구를 이용해 국내 무역 상품의 국경 간 운송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공지 -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지린성과 헤이룽장성에서 생산되는 지하자원과 곡물 등의 물자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통해 중국 남방 지역으로 운송 가능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세프 “북한 어린이·임신부에 결핵 등 백신 114만 회분 접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니세프 공보담당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월 13개 지역에서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어린이와 임신부에 백신 접종이 이뤄졌다고 답변 - 이 백신들은 지난해 11월 말 열차를 통해 북한에 반입된 것으로, 당시 유니세프는 어린이 54만~69만 명, 임신부 최대 43만 명에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설명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4. (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과 6년 만에 외교관계 복원 부르키나파소 “北무기 더 원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브라힘 트라오레 부르키나파소 임시 대통령, ‘지난 3월 북한과의 동맹 복원으로 무엇을 기대하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북한이 1985년에 준 무기들을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면서, 북한에게서 더 많은 무기를 받아 싸울 수 있기를 원한다고 답변
5. 5. (금)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근맹원·농업근로자들의 모임 진행(5.4., 수산리계급교양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영철(농근맹 중앙위 부위원장), 최용(남포시 당위원회 비서), 농근맹, 관계 부문 일꾼들, 강서구역의 농업근로자와 농근맹원 참가 - 북한을 핵공격 대상으로 정한 “악의 원흉 미제와 특등역적무리의 도발책동”을 강력히 단죄 • 평안북도 여러 농촌 마을에서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중·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러 외교장관 회담(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장관회담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방면에서의 양국 관계 심화를 약속하고, 신냉전과 다양한 형태의 패권에 대해 반대하고, BRICS, G20, UN과 같은 다자체제와의 협력 강화
	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인도 외교장관 회담(SCO 외교장관회담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을 재확인…中, ‘중국-인도 국경상황이 일반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을 지적’
5. 6. (토)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중국-파키스탄 외교장관 전략대화 파키스탄서 개최, 공동 기자회견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 전략, 경제, 국방, 교육, 문화 등에서의 협력과 양자 관계에 대해 논의 - 중국의 근린외교에서 파키스탄이 갖는 특별한 위치에 대해 재확인…파키스탄의 주권을 지지하며, 파키스탄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보건기구(WHO), 제15차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2020년 1월 발효한 코로나19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을 종료하기로 결정
5. 7. (일)	한·일	<p>〈 日 기사다 총리 방한(5.7.~5.8.)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확대 정상회담(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尹 대통령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유익한 발걸음이 되길 기대해” - “엄중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일 간의 협력과 공조는 양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꼭 필요” - “양국이 과거사 완전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 위해 한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야” [기사다 총리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월 회담에선 한·일관계를 중층적으로 강화하고 재구축할 것, 그리고 (한·일 간) 위축된 분위기를 불식하고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일치” - “서틀외교 본격화돼 매우 기쁘게 생각” • 한·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5.7.)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尹 대통령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서틀 외교가 본격화된 것을 뜻깊게 생각” - “양국이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 - “韓 반도체 제조업체와 日 소부장 기업들이 함께 견고한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하자는 데 의견이 일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7. (일)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가올 G7 정상회의 계기에 3자 정상회담 등 한·미·일 3국 정상 간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 -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하면서, 韓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日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추진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 <p>[기사다 총리 모두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3월 이후 두달 사이 양국 협력 힘차게 움직여” - “금융, 관광, 문화 예술 등 폭넓은 분야서 대화 가동” - “수출통제 당국 간 대화도 적극 이뤄져 절차 진행 중, 경제교류도 힘있게 부활” - “(오염수 관련) 후쿠시마 제 1원전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 받아들이기로, 나쁜 영향주는 형식 방류는 인정하지 않을 것” - “(과거사 관련) 혹독한 환경에서 힘들고 슬픈 경험 가슴 아파” - “역대 내각 역사인식 계승 입장 흔들지 않아” - “北과 대화의 창이 열려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尹 대통령이 다시 강력하게 지지를 표명해 준 데 대해 감사” <p>[주요 질의응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한·일 함께 리더십 발휘 중요, 북핵 위협 노출에 안보협력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워싱턴 선언은 日 배제 않아” - 尹 대통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韓 국민의 건강과 안전 우려에 대해 기사다 총리가 불식 약속” - 기사다 총리 “양국관계 개선의 구체적인 성과에 주목하는 것이 日의 의욕” - 기사다 총리 “1998년 10월 공동선언 포함 역대 내각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며 힘들고 슬픈 경험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 尹 대통령 “강제징용해법 정부방침은 바뀌지 않았으며,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 해결책으로 15명 중 10명이 받아들인 상황” - 尹 대통령 “과거사 인식문제는 진정성이 중요하며 일방 상대 요구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도·시·군 근로단체조직들의 복수결의모임·성토모임 진행 보도 - 전체 참가자들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고 이 땅위에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우고야 말 확고부동한 의지가 반영된 구호”들을 외쳤다고 보도 • 제58차 전국학생소년예술축전 폐막(5.7.) 보도 • 황해남도 배천군·평안북도 운전군 농촌 마을에서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5. 8. (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한·일 산업·과기·미래세대 교류 등 후속 조치 철저히 임해달라”(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지시사항)
	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강 외교부장-주중 미국대사 베이징서 회담 - 中, 미국은 중국에 대한 시각을 올바르게 해야 할 것...미국은 중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을 그만두고, 중국의 바텀라인-레드라인을 존중해야 함. - 니콜라스 번스 대사, 친 부장과 미·중관계 도전들과 양국 유대의 안정화, 고위급 소통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고 공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러시아 무기 공급이 의심되는 중국 7개 기업에 대한 EU의 제재조치 검토 보도에 대해 ‘중·러 협력을 들어 중국에게 실시하는 불법 제재에 반대...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EU의 행동은 중국과 EU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깎아내리는 것’
	일·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프랑스 2+2 회담 화상 개최, 공동성명 발표 - 양국의 특별한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키기 위해 안전보장·방위 분야의 협력 및 UN 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연계를 강화 - 핵확산 위기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강하게 비난, 북한 핵 문제의 CVID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재확인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9. (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덕훈(내각 총리), 평안남도·황해북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평안남도 농촌경리위원회 봉학남새농장·순천시 풍탄농장·황주군읍농장·룡천농장 등 여러 농장, 탄소하나화학공업 창설을 위한 대상건설장·순천화학연합기업소 영양액비료 공장 건설장 등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선희 외무상, 왕야전 신임 북한 주재 중국 대사와 담화 진행(5.8.)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통적인 북·중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승화·발전시켜나갈 확고부동한 입장 표명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尹 대통령,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이뤄져…한·일관계가 과거 가장 좋았던 시절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제19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두운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한·일 양국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 “北의 선의에만 기댄던 대한민국의 안보도 탈바꿈해 우리의 3축 방어체계를 한층 강화” “워싱턴 선언과 핵협업그룹(NCG) 창설을 통해 美 핵무기를 포함한 전례 없는 수준으로 韓에 대한 방위를 약속하였고, 韓은 美 핵자산 운용에 관한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통해 확장억제를 한층 강화” “우리 정부는 분쟁의 군사적 해결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 대통령실 “한·미·일, 北 미사일 정보공유 협의체 조속 구축”(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일 미사일 정보의 실시간 공유는 작년 11월 3국 정상회담에서 합의, 현재 세 나라 군 당국이 체계를 만들고 있어” 외교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하여 IAEA 검증과는 별개로 우리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현장시찰단을 독자적으로 파견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커”(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정부는 오염수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안전하고 국제기준에 부합되게 처리돼야 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견지” “우리 정부 관련기관과 산하기관의 전문가들이 오염수 처분 관련 시설과 설비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시찰하고 확인하면서 필요한 전문적 분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것” “(中 언론 관련)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에 입각하여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해…이러한 견지에서 中 언론들이 품격 있고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하는 것이 한·중 관계의 발전에 중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부, ‘미·한 안보 협력’에 대한 설명자료 공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무부, ‘미·한 안보 협력’에 대한 설명자료(Fact Sheet)를 통해 한·미 동맹이 안보 위주에서 국제 도전 과제에 함께 대응하는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 이어 “2만 8천 500명이 넘는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방어하며 한국전 정전협정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군과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미·한 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참여하는 3개의 양자 상호방위동맹 가운데 하나”라고 부연 또한 “미국은 한국이 궁극적으로 연합방위군을 주도하고 역내 안보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위 판매를 통해 한국의 방위 현대화 노력을 지원한다”면서 “2019 회계연도부터 2021 회계연도까지 DCS(직접상업판매)를 통해 약 34억 달러의 방위 물품을 한국에 영구 수출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설명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 “북한, 사이버 활동으로 미사일 자금 절반 총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앤 뉴버거 NSC 사이버·신기술 담당 부보좌관, ‘특수경쟁연구프로젝트(SCSP)’ 주최 대담에서 사이버 분야에서 미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사악한 문제(the wickedest problems)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을 지목 이어 “북한이 근본적으로 암호화폐와 사이버 노력을 통해 미사일 프로그램 자금의 절반을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이 같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파악하기 위해 각 부처와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9. (화)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레이더 시스템 공조가 한·중 간의 '3불정책'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 관련) "한반도에 남아있는 냉전의 산물을 한·미·일의 군사 협력에 활용하는 것은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사드문제가 한·중 간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협의한 내용을 상기하여 이 문제를 잘 다루어주길" • 제5회 중국-아프가니스탄-파키스탄 외교장관회담 파키스탄에서 개최, 공동성명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프가니스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 아프간 사람들과 연대 - 인프라 건설에 대한 3국의 강한 연결과 규범·기준에 대한 3국의 약한(soft) 연결 강조
	중·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강 외교부장, 독일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접견(5.9.), 솔츠 총리 '다극체제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모든 행위자들 간의 평등 원칙이 지켜져야 함'...친강 외교부장,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중·독 외교장관 회담(5.10.), 中, '대만의 중국 반환은 2차대전 이후 국제질서의 일부분임...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원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해야 할 것',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만든 장본인도, 위기에 처하게 만든 장본인도 아닌 정치적 안정을 지지하는 국가...독일이 유럽의 균형잡히고,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체계를 구축하길 기대함'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세계대전 전승절 열병식 개최...보안 강화·일부 지역 행사 취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번 열병식에는 약 8천 명의 병력이 참가해 2008년 이후 최소 규모를 기록 - 러시아 남부 사라토프 주지사가 안전 우려로 전승절 열병식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는 등 러시아에서 전승절 열병식을 취소한 지역이 최소 6곳
5. 10. (수)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러시아 전승절 기념 축전 발송(5.9.)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군, 러시아 국민에게 인사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반도 문제로 미·중 협력 견인 노력"(동아시아연구원 국제회의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일치된 대응이 필요" - "특히 북한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中의 역할이 절실한 상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대변인, "북한 미사일 정보 실시간 공유 위해 한·일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틴 메이너스 국방부 대변인, VOA의 미사일 관련 서면질문에 "지난해 11월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 약속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를 늘리기 위해 한국, 일본과 협력하고 있다"고 답변 - 이어 "한·미·일 3자 협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을 포함해 공동의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 - 또한 "이러한 노력은 역내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군대 사이에 더 큰 상호운용성과 준비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부연
	미·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이크 설리반 美 국가안보보좌관-왕이 中 당중앙 외사판공실 주임 오스트리아서 회의 진행(5.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중관계의 장애물들을 없애고 관계 안정화를 위한 건설적 논의 진행 - 양측은 현 아시아-태평양 정세, 우크라이나 및 다른 국제 사회 이슈에 대해 시각을 교환하고, 향후 전략적 대화 채널을 잘 활용하기로 협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외무상, "2024년 도쿄에 NATO 연락사무소 개설 검토 중"(CNN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락사무소 설치를 논의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세계가 불안정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 - (5월 12일) 中 외교부 대변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NATO의 지역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곳...일본은 NATO의 아시아태평양 확장의 선봉장이 되려 하는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1.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전 정부가 정치 이념에 사로잡혀 북핵 위협에서 고개를 돌려버려…비상식적인 것을 정상화해 나가야”(국방혁신위원회 1차 회의 주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우리 군의 능동적 억제대응 능력을 보강해, 北 전 지역에 대한 정찰감시와 분석 능력, 목표를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초정밀 고위력 타격능력, 복합·다층적인 대공 방어능력을 충실하게 확보를 해야” - “국방 혁신의 목표는 고도화되는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압도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는 것” - 국방혁신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대통령령에 의거해 신설된 대통령직속위원회로서 ‘국방혁신기본계획’ 심의·조정 역할 담당하며,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위원 8명 중 김관진 前 국방부 장관을 부위원장으로 위촉 - 합참의장, “北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한국형 3축체계를 진화적으로 발전시키고, 실행력이 강화된 억제·대응체계를 구축해 워싱턴 선언을 구체적으로 이행” • 합동참모본부, 北 무인기 침입 준비가 미비하다는 외신보도 반박 및 공식입장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론작전부대 기술과 장비 확보에 3~5년이 소요된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현재 임무 및 운영개념, 부대구조를 발전시키고 전력 확보 계획을 수립했으며 연내 드론 작전사령부를 창설할 예정”
	중·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프랑스 외교장관 회담 베이징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위급 교류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지속 - 프랑스는 불력 갈등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국가들의 화합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5. 12. (금)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강도 희천시 지신남새공장에서 살림집 입사모임·고급중학교 개교식 진행(5.11.) 보도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통일부 장관, 통일부 직원에게 ‘취임 1년’ 이메일 발송 “지난 1년 우리가 거둔 성과들이 결코 적지 않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의 계속되는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하면서도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원칙을 견지하며 남북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 - 구체적인 성과로는 ‘담대한 구상’ 마련,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신(新)통일미래 구상’ 수립 착수에 대해 평가 •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IAEA 회원국 중 日 현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이번 韓 사례가 최초이자 유일”(부처 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노력으로 지난 2021년 7월 11개국 전문가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태스크 포스에 우리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는 오염수 안전성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기관,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역시 참여” - “오염수에 대해 국제법,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채분되어야 하고 과학적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의 일방적 방출은 분명히 반대” - “후쿠시마 시찰단, 20명 내외로 구상하여 방류 전반 검토” • 통일부, “北의 개성공단 무단가동 동향에 대해서 주시…명백한 남북합의 위반이며 불법적인 우리 재산권 침해”(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北이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시설을 철거 중인 상황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예의주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2. (금)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방한한 아소 前 日 총리와의 만찬에서 “한·일 정상 간 셔틀외교 복원 등 최근의 관계 개선 분위기를 살려 양국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된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미래세대 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야” •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시찰’ 한·일 국장급 실무협약(서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일 양측은 시찰단의 日 방문을 나흘 일정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시찰 프로그램을 포함한 방문 세부 사항을 매듭짓기 위하여 추가 협의를 가능한 조속히 갖기로 합의 - 韓, 日 방시능 핵종 분석 역량과 오염수 정화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 및 방류시설 운영 상황 등을 직접 파악해 해양 방류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검토 - 日, 韓 요구 일부 시찰 항목 난색 표시 - (5.13.) 日 외무성, 경제산업성, 원자력규제청, 도쿄전력 등 관계자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韓 정부(외교부, 국무조정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등) 대상 설명회 개최
	한·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앤 마리 트레블리안 英 외무부 인도·태평양 담당 부장관, 한·영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경제·안보 분야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한해 이도훈 외교부 제2차관과 제1차 한·영 고위급 경제협의회 개최 - 글로벌 공급망 교란 대응과 경제안보 강화,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 및 ‘한·영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 의향서’ 체결 - 미·중 간 전략경쟁이 가속화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내외 상황에서 경제안보, 공급망 협력, 과학·기술협력, 에너지 안보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경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방안들을 중점 협의 - 양국은 각각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하고 동 지역내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 인태지역 내 양국 간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향후 개발협력,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에 대해 공감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장관, 디플트 우려에 “軍에도 영향…중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틴 장관, 2024 회계연도 예산 심사를 위한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에서 “중국과 소통선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며 “중국 국방부장관 몇 차례에 걸쳐 접촉을 이어 왔다”고 설명 - 이어 “이전 국방부장관은 대면 회담을 진행했고, 현재는 새 국방부장이 취임한 상태”라면서 “새로운 국방부장에게 서한을 전달했으며 회담을 제안했다”고 부연 - 특히 “우리가 대응해야 할 문제들이 있으며, 고위급 차원에서 바로 통화를 통해 대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업무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강 외교부장 노르웨이 방문, 노르웨이 총리와 회담
5. 13.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룡해(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주 간등 물길 공사정형 현지요해
5. 14. (일)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 “日 오염수 시찰 실무협의 대단히 협조적…3박 4일 일정에 대해 대략적 합의”(대통령실 고위관계자 브리핑)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美 코브라볼 정찰기, 이틀 연속 대북 정찰비행(5.14.~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공군 RC-135S, 14일 오전 7시 40분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을 실시간 추적 - 미국 공군 RC-135S, 15일 오전 일본 오키나와 가데나 공군기지를 이륙해 서해상으로 출동
5. 15.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안북도·황해북도·강원도 농촌 여러 마을에서 살림집 입사모임 진행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5. (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양국 기업인 역할 중요” (일한경제협회 대표단 접견 모두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으로 일한·한일 경제협회와 회원사들의 주도로 한일 간 민간 분야 협력이 활성화 되기를 기대” -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 - “양국을 넘어서 제3국으로 공동진출하는 기회를 모색해서 공동번영과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해야” •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北 핵위협으로 국제사회 인정받는 것은 헛된 꿈” (원한안보회의 리더스 회의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 들어 유일하게 핵실험을 실시한 국가인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공세적이고 자의적인 핵 교리를 표방” - “北의 행동을 묵인한다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저해” - “中에서 접수된 해킹 신고 중 北 해킹 조직 소행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주중 한국대사관, “韓 반도체에 대한 中 수입 규제 움직임 없어”(대사관 관계자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는 中의 핵심 수입 제품으로, 중국 내에서 반도체 수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산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 中 입장인 것으로 파악”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2022 종교자유 보고서’ 발표…“北, 종교자유 침해 심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해) 7월 ‘북한에서는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계속 부인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은 대인적 신념 체계를 용인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했다”고 언급 - 이어 “북한은 종교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처형하고 고문하고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에트루리아 정상회담 개최(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中, 상호존중, 상호이해, 상호지원, 상호협력은 중국-아프리카 친선의 핵심…중국-아프리카 협력은 남남협력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 - 에트루리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전히 패권주의 및 부당한 대우와 맞서고 있음, 중국이 인류의 발전과 진보, 국제 공평과 정의에 더 큰 기여를 할 것이라 기대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총리, 중앙일보 인터뷰 진행(도쿄 총리관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징용 관련 발언에 대해) “일본 정부 입장에 추가해 자신의 생각을 솔직히 말씀 드린 것…(기업의 제3자 변제 참여는) 민간 기업의 대응에 대해 정부가 코멘트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 -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안전성분만 아니라 ‘안심’에 대해서도 한국 분들의 이해를 심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북한과의 대화 창구는 열려 있으나, 일본과 한국, 한·미·일 안전보장 협력에 의해 역지력과 대처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 -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관련) “일본의 국가 안전보장 전략은 첫번째로 외교의 중요성을 내걸고 있음…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강력한 외교를 추진해나가는 데 있어 자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지킬 수 있는 방위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 • 제1회 우크라이나 경제부흥 추진 준비회의 개최, 기시다 총리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투자환경 정비, 투자촉진, 제3국협력, 국제기구와의 연계, ODA 시너지 효과 창출 등을 테마로 우크라이나의 요구와 현지의 상황에 맞춰 일본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 입법원장, 美 하원서 5억 달러 무기지원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시쿰 대만 입법원장(국회의장), 미 국회의사당을 방문하여 미국의 대만에 대한 5억 달러 규모의 무기 지원 계획을 논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6. (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황해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북도 신계군·서흥군, 황해남도 봉천군·배천군·연안군·청단군 등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원 세출위원회 '미·중관계 투자 예산' 청문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틴 국방부 장관, "미국은 조만간 대만에 대해 상당한 추가 안보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는 대만관계법에 기초해 지켜온 우리의 오랜 약속"이라고 언급 - 이어 "대만의 자체 방위를 위해 미국의 지원은 핵심적"이라며 "정부는 이를 밀어붙이는 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국방 자원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 - 블링컨 국무부 장관,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며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적 이익"이라고 설명 - 이어 "지난해 투자, 조율, 경쟁을 위해 정부의 포괄적 대중국 정책을 수립할 기회를 가졌다"며 "초당적인 반도체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포함한 이 같은 노력으로 미국에서 역사적 투자가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 -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시행에 매우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이는 공급망 다변화를 포함해 클린 경제 등을 포괄하며, 대부분 참여국에서 큰 열정을 확인하고 있다"고 언급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정례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장지구에서 중국이 '대량학살'을 저질렀다는 미 블링컨 국무장관의 발언에 대해 "진실이나 합리성을 존중하지 않는, 이데올로기적 편견에 주도된 발언...중국은 신앙의 자유를 보호하며, 집단 학살은 미국이 퍼트리려는 거짓말"
5. 17. (수)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정찰위성발사 준비위원회사업 현지지도(5.16.)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설 위성발사준비위원회 사업정형 요해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힘에 의한 현상변경·협박엔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해야"(조선일보 주최 제14회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 개막식 축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위기와 도전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는커녕, 힘에 의한 현상 변경과 강압 외교, 핵과 같은 WMD(대량살상무기)에 의한 협박을 일삼는 안타까운 세력이 있다" -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이러한 시도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합쳐 단호하게 대응하고 공동으로 국제법과 국제 규범을 구현해야 한다" -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불법적 침략과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성공한 전례를 결코 남겨서는 안 된다는(차원에서) 우리 모두의 지지를 보내야 한다" -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비판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실상은 필연적인 것"..."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되, 이러한 불법적인 도발에 대해 저는 단호하게 대응해 왔다" • 尹 대통령,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의 지지 연대를 전한다"..."희생자가족과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해 애도의 뜻을 표한다" - 젤렌스카 여사, "글로벌 국가인 한국이 보여준 지지와 연대,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한다"..."앞으로도 한국이 가능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 • 박진 외교부 장관,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일보 주최 「제14차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 참석 차 방한한 젤렌스카 우크라이나 영부인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정세, △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우크라이나 재건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협의 - 박 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연대를 밝히고, 전쟁으로 희생된 가족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에 대한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한국 또한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던 나라로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과 시련에 대해 공감을 표함.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7.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젤렌스카 영부인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고,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전장에서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위하여 구급후송차량, 장갑구급차 등 장비 지원을 희망 - 이에 박 장관은 작년 1억 달러에 이어 추가 1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공약 등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인도적 수요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 • 박진 외교부 장관,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주지사 및 페루 환경장관과 양자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주지사와의 면담에서 박진 장관은 우리 기업들의 對멕시코 최대 투자지역인 누에보레온주 주지사의 방한을 통해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이 보다 가속화되고 확대되기를 기대하였으며, 최근 니어쇼어링 추세에 따라 멕시코가 미주 시장 주요 생산 기지로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고, 전기차, 이차전지 등 우리 첨단산업 기업들의 멕시코 진출을 위한 주지사의 협조를 당부 - 페루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박 장관은 금년 양국 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에 방한을 적극 환영하고, 양국 간 기후환경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기대하였으며, 양 장관은 「한-페루 기후변화협력협정」 문안이 최근 합의된 것을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 내 정식 서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통일부, 대북협력 국제기구 한국소장 간담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형일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개최하였으며,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아동기금(UNICEF), 국제백신연구소(IVI) 등의 한국사무소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 - '코로나19' 이후 북중 간 육로국경이 3년 넘게 통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국제기구들의 대북 인도주의 활동 구상 및 상호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루어짐. •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공식 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안보실과 국가정보원은 점차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위협에 맞서 일원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판교에 위치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 헌판식을 갖고 사이버위기 통합대응조직 운영을 본격화한다고 밝힘. -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은 올해 3월 개정된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국가정보원과 정부·공공·민간 전문가들이 합동으로 국가 사이버위기 대응활동을 수행하며 국가안보실이 이를 감독하는 체계로 운영 • 평화외교기획단장, 북한인권 관련 美 국무부 관계자 등 면담(5.17.~5.19., 워싱턴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영희 평화외교기획단장, 美 국무부 주요인사 및 前 북한인권특사 등을 만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 - 면담 대상은 스콧 버스비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로버트 킹 前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그레그 스칼라튜 美 북한인권위원회(HRNC) 사무총장 - 정 박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대북 정책 협의 • 北 두 일가족, 6일 밤 서해 NLL 넘어 '어선 귀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소식통은 "어선에는 어린아이들을 포함한 북한 주민 여러 명이 타고 있었다"며 "정확한 수를 밝힐 수 없지만 10명은 넘지 않는다"고 전함. - 어선을 탄 북한 주민은 '실수로 표류한 것이 아니다'라며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으로 전해짐. - 군경 및 국가정보원 등 관계 당국은 합동신문을 진행 중이며, 귀순자들은 두 일가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 간 관계를 확인 중임. - 일가족 단위로 어선을 타고 NLL을 넘어 귀순한 사례는 2017년 7월 이후 처음(정부 공식 발표 기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7. (수)	한·캐나다	<p>〈 캐나다 트뤼도 총리 방한(5.16.~18.)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뤼도 총리 국회 연설(5.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협력 증진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한국인들이 43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을 선택한 것과 같은 이유” - “비핵화·평화 위한 한국 노력 지지”...“기후변화·원전 분야에서도 협력을” - “한국은 원자력에너지의 리더이고, 우리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이 에너지원에 대한 협력을 지속”...“넷제로(탄소중립) 세상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해결책 모색” - 외국 정상이 국회 연설을 한 것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이후 처음 • 한·캐나다 확대 정상회담(5.17.) <p>[尹 대통령 모두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캐나다는 오랜 우방이자 혈맹” - “자유, 인권, 법의 지배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양국의 전통적 우방 관계는 이제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로 도약” <p>[트뤼도 총리 모두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북대평양 우방국으로서, 동맹국으로서 앞으로도 계속 민주주의를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 같이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 <p>[한·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공동성명: 새로운 60년을 함께 더 강하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이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자는 데 합의 -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중국을 겨냥해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 -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북한 인권을 보호·증진 하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 - 기존 군사 정보의 공유 범위를 방산 분야까지 확대 및 정보 공유를 기존 정부뿐 아니라 군수산업 분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새 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 합의 - 양국 외교·산업 장관이 참여하는 ‘2+2 고위급 경제안보대화’ 출범(지난해 9월 캐나다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속조치) - ‘핵심 광물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핵심 광물 제련, 교역, 재활용에 이르는 포괄적인 공급망 협력을 추진 - 기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청년 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워킹홀리데이 연간 쿼터는 기존(4,000명)의 3배인 1만 2,000명으로 확대, 차세대 전문가·인턴십 등 새로운 프로그램 도입 및 참여 연령 상한을 30세에서 35세로 상향 • 한·캐나다 정상 공동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尹 대통령, “경제와 안보 융합의 시대에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 기반을 확충”...“앞으로 양국은 공급망 안정, 청정에너지 협력을 포함한 핵심 경제 안보 이슈를 정기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 -尹 대통령,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그 위협을 강력히 규탄” -트뤼도 총리, “캐나다는 한국이 한반도의 비핵화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을 지원할 것”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북한의 위성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발사 시 책임 묻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부대변인, 북한의 위성 발사 징후 관련 질문에 인공위성을 우주로 발사하는 데 사용되는 우주발사체(SLV)를 포함해 탄도미사일기술을 이용하는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답변 - 이어 “조치 측면에서, 우린 북한에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많은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러한 조치를 했으며, (북한이 도발을 지속한다면)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 - 다만 “우린 북한이 추가 위협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며 대화에 나서라고 언급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8. (목)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왕아군 중국 신임 특명전권대사 접견(5.17.)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명호(외무성 부상) 등 배석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2023 FMS 이니셔티브' 발표...심사 절차 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대외군사판매(FMS)의 95%가 48시간 이내 승인이지만 나머지 5%는 복잡한 정책 이슈와 범부처 조정을 수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토 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점검했다"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FMS 이니셔티브'를 발표 - 이어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은 FMS를 통해 연간 약 4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장비 등을 구매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경쟁 관리, 공급망 문제 등 국제 안보 상황 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재평가하고 조정할 때가 왔다"고 설명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계기, 미·일 정상회담 개최(일본 히로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대통령,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보의 초석이라고 강조하고, 모든 범위의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확장억제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에 대한 미국의 약속 재확인 - 미·일 정상은 일본의 개정된 전략 문서와 국방비 증액을 기반으로 한 방위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법을 논의 - 기시다 총리는 한·일관계의 진전에 대해 설명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안전보장협력을 포함한 지역의 역지력 강화 및 안전 보장이사회 대응을 위해 미·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나갈 것에 대한 의견 일치 -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잔인하고 불법적인 침략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결의 확인...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국제법에 위배되는 중국의 강압적인 행동 등 역내 안보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중국 정부 특별대표 5월 15~26일 우크라이나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을 만나 우크라이나 위기 해결을 위한 중국 입장 재전달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필요 시 드론 격추 가능"...대응 강화법 만장일치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원, 1차 심의에서 공중과 육상, 해상 등에서 이동하는 무인항공기(드론)를 자국 법집행 기관들이 보안상 필요에 따라 격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5. 19. (금)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미 국무부, 한·미 국장급 기술정책협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현수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방한 중인 세스 센터 미국 국무부 핵심·신흥 기술 부특사와 한·미 국장급 기술정책협의를 개최 - 이번 한·미 국장급 기술정책협회는 한·미 정상회담(4.26.)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양국 간 핵심·신흥기술 협력 심화를 위한 전략적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 동 협의에서는 △양자(퀀텀), △인공지능, △바이오 등 주요 핵심·신흥기술에 대한 정책 동향과 우선순위 등을 공유하고, 국제기구에서의 기술규범 및 표준 관련 공조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 신형 호위함 '천안함' 취역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 주요 관계자들 및 천안함 유가족 및 생존 장병 참석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9. (금)	한·G7	<p>〈 尹 대통령 방일(5.19.~21.)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히로시마 동포 원폭 피해자와의 만남(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모두 발언)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 “한일 양국 정상이 함께 위령비를 찾는 것은 사상 최초이고, 사실 한국 대통령으로서도 이 위령비 참배가 처음” - 尹 대통령, (마무리 발언) “금년 6월에 재외동포청 설립”...“재외동포청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나 아니냐와 상관없이 우리 한국 동포면 누구나 아주 체계적으로 지원과 보호의 대상” • 尹 대통령, G7 정상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G7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날 G7이 정리한 핵군축에 관한 공동문서인 ‘히로시마 비전’ 토대...핵 보유국을 5개국(미국·영국·러시아·중국·프랑스)으로 제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핵군축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 - “북한의 전례 없는 횡수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한다”... 2021, 2022년 공동성명에서 북한을 ‘DPRK’로 칭한 것과 달리 ‘North Korea’로 명시 -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불법적으로 침략하는 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겠다” - “대만해협 평가와 안정의 중요성이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무력과 강압에 의한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尹 대통령 모두발언] (G7 정상회의 확대세션 III (평화안보, 법치, 글로벌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에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무력에 의한 인명 살상이 자행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의 자유와 번영이 심각하게 침해”...“이는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정면 위반으로서 국제법 위반”...“북한 정권이 자행하는 인권 유린 또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서 국제사회가 더이상 이를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 한·호주 정상회담(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정상은 한국과 호주의 관계가 2021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것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음을 평가 -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과 호주가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미래 첨단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의 교역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합의 -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이 인태 지역뿐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번영에 심각한 위협이라는 인식 하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합의 • 한·베트남 정상회담(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작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국의 對베트남 개발협력을 확대해 나가며, 국제무대에서도 양국이 함께 협력해 나가길 희망 - 쩡 총리, 한국의 ODA와 개발지원 사업이 확대되기를 희망...앞으로 베트남은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한국과 전략적 공조와 협력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힘. • 한·인도 정상회담(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한·인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 정상 간 개최한 첫 대면 회담 - 양 정상은 방산 협력 및 디지털, 바이오헬스, 우주를 비롯한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 - 2010년 발효한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양국의 교역을 더욱 확대하기로 합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9. (금)	한·G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이탈리아 약속 환담(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이탈리아 북부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5.16.)로 커다란 피해를 입은 데 대해 심심한 애도와 위로 - 멜로니 총리,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하고, 이번 이탈리아의 홍수로 인한 재난 상황으로 당초 예정보다 조기 귀국하게 되었음을 설명 및 이른 시일 내에 대통령과 정식 회담을 갖기를 희망 • 한·영국 정상회담(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한·영 간 원전 협력 확대, 디지털 파트너십 체결,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수낙 총리의 관심을 당부 - 수낙 총리, 에너지(원자력),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과 각별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화답 • 한·일 정상회담 및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우리가 함께 참배한 것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 추모의 뜻을 전함과 동시에 평화로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日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기억될 것” - 기시다 총리, “이것은 양국 관계에서도, 세계 평화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 • 한·코모로 정상회담(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코모로와 같은 인도양 아프리카 국가들이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중요한 동반자임을 강조하였으며, 아프리카연합(AU)의 G20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힘. - 아잘리 대통령, 식량상황 개선, 제조업 협력, 교육 훈련, 기후변화 대응 등에 있어 아프리카와 코모로는 한국의 지원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밝힘. •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작년 7월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방한 이후 양국 간 협력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전되고 있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말하고,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한·인니 간 투자, 인프라, 방산 협력 강화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함. - 조코 위도도 대통령, 농업 발전, 전기자동차 생태계 구축, 정보통신, 소형 원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협력해 줄 것을 요청 • 한·미·일 정상회담(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상들은 대북억지력 강화를 위해서는 물론,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질서를 공고히 하는 데 3국 간 전략적 공조를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 - 정상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와 같은 3자 안보협력,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3자 공조 강화, 경제안보,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관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 협력을 심화하기로 합의 •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5.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에 대한 연대와 지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 - 젤렌스키 대통령, 한국 정부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 -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복구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에도 공감하고,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 우크라이나의 신속한 전후 복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계기, 미·일 외교장관 회담(일본 히로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장관,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에 G7과 철 통같은 미·일 동맹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경제 협력과 안보,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대한 양국의 지속적인 지지,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해 논의 - 또한 양국은 글로벌 리더로서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19. (금)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중국 시안에서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정상 참석 - 시진핑 주석, '상호원조, 공동발전, 보편적 안보 및 영원한 우정의 공동 미래를 가진 중국-중앙아시아 공동체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 - 6개국 정상 공동기자회견 개최, "6개국은 주권, 독립, 안보, 영토보전 등 각자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 서로 지지하고, 각자가 선택한 발전의 길을 존중하며, 그 어떤 세력의 내정간섭에도 반대", "일대일로 협력 1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을 것", "스포츠, 고고학, 관광, 의료보건의 인적교류 심화", "테러리즘, 분리주의, 극단주의, 마약, 초국가적 범죄에 맞설 것", "UN헌장을 중시하고, 다자주의와 국제법 규범을 수호" - 2년에 한 번씩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 • 시진핑 주석,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카자흐스탄(5월 17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5월 18일)과 각각 양자회담 개최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부, 미국에 보복 제재...오바마 포함 500명 입국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부, 미국의 추가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오바마 전 대통령을 비롯해 연방 하원의원 45명, J.D. 밴스·케이티 브리트·에릭 슈미트 상원의원을 포함한 500명의 입국금지 명단 발표 - 이어 외무부는 명단에 "미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탄압과 직접 관련된 정부·법집행 당국자들이 포함됐다"고 설명 • 연해주 지역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 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해주 정부, 헤이룽장성 무단장·쑤이펀허·둥닝 등 3개 도시 대표단과 연해주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까지 중국과의 교역 규모를 1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 논의 - 연해주 정부는 "2022년 연해주 대외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57%로 교역 규모는 75억 달러에 이른다"며 "우리는 2024년까지 이 규모를 25억 달러 더 늘릴 것"이라고 공개하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접경지역에 있는 포그라니치니-쑤이펀허, 폴타브카-둥닝 차량 국경 검문소 2곳에 24시간 운영 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핵군축 관련 별도 성명 발표 "북, 도발행위 자제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공동성명과는 별도의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춘 성명을 발표, 북한을 향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발사 등 역내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 - 성명에는 '전례 없는 파멸과 심각한 비인도적 고난을 상기시키는 히로시마에 모여 '핵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위한 결의를 재확인한다'는 내용이 포함 - 또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을 비난하면서 지난 2월 참여 종단을 선언한 핵군축 조약에 복귀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으며,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객관적인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핵보유국에 정보 공개를 요구
5. 20. (토)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정은, 현철해 1주기 즈음 꽃송이 진정(5.19.)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미리아국렬사릉 방문, 강순남(국방상) 동행 • 현철해 1주기 추모대회 진행(5.19., 4.25문화회관)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 조용원, 최룡해, 리병철(이상 당중앙위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최선희(외무상), 강순남(국방상) 등 참석 - 리일환(당중앙위 비서) 추모사 진행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0. (토)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계기, 한·미 외교장관 회담(일본 히로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부대행사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적인 미국 국빈 방문을 축하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해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의 발전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다른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또한 블링컨 장관은 또한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일본 히로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 12년 만의 양국 정상 간 셔틀외교의 완전한 복원을 환영하고, 외교·안보, 경제안보 등 정부 간 제반 분야 협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평가하였으며, 한·일 간 주요 현안 및 상호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논의 - 북핵 위협 고도화, 우크라이나 사태,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엄중한 국제정세 하, 지역 및 글로벌 현안 관련 한·일, 한·미·일 간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의견 합치 - NPT 체제의 유지·강화의 중요성 재확인
	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일 교육 협력 각서(Memorandum of Cooperation in Education)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무부-일본 문부과학성(MEXT), 미·일 기업과 대학이 반도체, 양자컴퓨터 연구 개발(R&D)에 총 2억 1,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의 교육 분야 협력각서 체결 - 반도체 분야에서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사와 도쿄일렉트로닉이 도호쿠대 버지니아 공대 등 미·일의 11개 대학과 제휴해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구축 - 미·일 간 연례 고위급 교육 대화가 개최될 예정이며, 미국의 주요 기술 회사 3곳과 상위 13개 대학이 양자 과학 및 반도체 연구 개발 분야에서 일련의 획기적인 파트너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
	미·일·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계기, 쿼드(Quad) 정상회담(일본 히로시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 미국 대통령-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쿼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하기로 합의 - 쿼드 정상들은 또한 중국을 염두에 두고 “협박과 강압이 없는, 주권을 존중하는 평화롭고 안전한 지역을 지향한다”고 강조 - 또한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불안정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무기 추구를 규탄하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에 따른 모든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도발을 자제하면 실질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G7의 중국 내정 문제 간섭을 개탄하고, 단호히 반대” 논평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21일) 중국 외교부 차관, 주중 일본대사 초치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대북제재위, FAO·WHO의 대북지원 제재 면제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4월 3일부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의 대북 농업용품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 요청을 승인한다고 발표, 이는 FAO가 3월 20일 요청한 이륜 경운기 10대, 이동식 콩 탈곡기 5대, 휴대용 급수 펌프 30개, 태양광 배낭 분무기 5개 등 약 7만 5천 800달러 상당의 물자 반입을 허가한 것 - 또한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 25일 제출한 산소발생기 대북 반입을 위한 제재 면제 요청도 5월 2일부로 승인한다고 발표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0. (토)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발표 “북한의 무모한 행동엔 강력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공동성명,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 하면서 추가 도발 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 - 이어 북한이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으로 포기 해야 하며,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도 안보리 결의에 따라야 한다고 요구 - 북한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우선시하는 데 대해 우려하면서 한국, 미국, 일본의 대화 제안에 응하라고 권고 -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인권단체의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일본인 납북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 - 또한 중국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대만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라고 촉구 - 중국이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동·남중국해 상황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G7은 “어떠한 힘이나 강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에도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 - 아울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을 촉구했으며, 티베트와 신장 지역을 포함한 중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계속 표시하겠다고도 설명 -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을 중단하고 즉시 조건 없이 병력을 철수하도록 중국이 압력을 가하라고도 요구
5. 21. (일)	한·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총리 방한 및 한·독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했던 올라프 솔츠 독일 총리, 21일 방한 직후 DMZ 방문 및 한·독 정상회담 - 양국 간 교역·투자 관계를 반도체, 수소,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첨단산업과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 -尹 대통령, “33년 전 통일을 먼저 경험한 독일은 한반도 문제를 잘 이해하고 공감하는 국가”...“북한이 불법적인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 -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한독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을 조속히 체결하여 방위산업 공급망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아갈 것” - 솔츠 총리, “DMZ를 방문해 매우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개발 이나 핵무기 개발이 대한민국 안보의 큰 위험인 현실을 알 수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대응해야 한다”...“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에 동참할 것”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 ‘中 메모리 시장 왜곡’에 동맹과 공동 대응 강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무부 대변인, “우리는 핵심 동맹 및 파트너들과 관여해 중국 측 조치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왜곡 대응을 긴밀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 - 이어 “우리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제한들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기업들의 중국 사무소”에 대한 최근의 급습 및 표적화와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는 자국 시장을 개방하고 투명한 규제 제도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과 모순된다”고 비판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1. (일)	미·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계기,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미국 "추가 군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 후 바흐무트 점령설을 부인하며 반격의 의지를 표명 - 바이든 미국 대통령, 우크라이나군에 3억 7500만 달러의 추가 군사 지원과 F-16 조종사 훈련을 포함한 아낌없는 원조를 약속했으며, 새로운 지원책에는 하이마스(고속 기동포병다연장로켓시스템),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탄약, 트럭 등이 포함 - 바이든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전투기를 러시아 영토 진격에 쓰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있는 러시아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안보판공심사실, 마이크론사의 제품에서 '심각한 네트워크 보안 위험 요소 확인' 및 '중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 발표
	일·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우크라이나 정상회담 개최(G7회담 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우크라이나에 100여 대의 트럭 등 자위대 차량 및 3만 식의 비상식량 제공...일본은 76억 달러 지원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것
	러시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부, "G7, 젤렌스키 일본에 불러 반러시아·반중국 '선동 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무부 성명을 통해 "G7 국가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해 회의장을 '선동 쇼'로 만들고 반러시아·반중국 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 - 성명은 "G7 국가들은 자신들이 통제하는 우크라이나 지도자를 회의장에 불러들여 행사를 선동의 장으로 만들었고 회담의 주요 결론은 반러시아와 반중국 메시지로 가득 찬 내용들이었다"면서 "G7 정상회담이 세계 질서의 안정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런 우리의 평가는 국제사회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언급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제76차 세계보건총회와 분야별 세부 회의 진행(5.21.~30., 스위스 제네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의제는 국제보건규약(IHR) 개정 문제로, 언제 다시 발생할지 모를 감염병 대유행 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지켜야 할 사항과 필요한 대책 등을 담은 IHR을 새로 마련하자는 것 - WHO는 내년 상반기까지 IHR 개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 중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회의 후 의장국 기자회견 "G7, 북한 핵·미사일·납치 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G7 정상들은 북한의 거듭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발표 - 또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G7으로서 하루라도 빨리 우크라이나에 공정하고 영속적인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고 제재 회피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직접 참석한 데 대해서는 "G7과 우크라이나의 흔들림 없는 연대를 보여주는 동시에 G7이 법의 지배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지켜낼 결의를 세계에 보여준 것은 뜻이 깊다"고 설명 - 중국에 대해서는 대화를 통해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사회 과제의 해결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G7이 공유했다면서 "G7은 동·남중국해 정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힘과 강압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으며,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중국과 대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고 강조 - 이어 이번 정상회의에서 G7과 우크라이나 사태와 기후변화,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한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저개발국)'를 연결하기 위해 대응할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2.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평지구 살림집 준공식 진행(5.21.) 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전현출(당중앙위 비서), 김수길(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박훈(내각 부총리) 등 참석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귀순한 북한 두 일가족 관련, “탈북민들이 우리 체제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탈북민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 - “북한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북한에 할 말은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게 하는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정립했다” - “역지와 단념, 대화의 3단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미, 한·미·일 관계가 좋아지면서 역지와 단념 부분이 강화되고 있는 것”...“북한이 언젠가 대화로 나올 거라고 긍정적·희망적으로 보고 있다” -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실질적인 비핵화를 이행해 나간다면 우리는 발맞춰 북한의 민생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 의사가 없으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도 추구하고 있지 않다”...“북한이 우려하는 그 어떤 문제도 대화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할 수 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도발과 단절이 아니라 민생과 협력의 길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 •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 “중국과도 전략대화 논의 중...한·중·일 회담도 추진”(YTN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 전략 대화를 시작해 보려 하고, (이를 위한) 계획이 오가고 있다” -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한국·일본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韓,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전문가 현장 시찰단 파견(5.22.~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투명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설명을 통해 오염수 해양방출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 내에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5월 31일) 시찰단 주요 활동 결과 보고, ‘주요 설비들이 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였으나, 성능의 적정성 및 장기운전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밀분석과 확인 작업 필요’ • 北, 정상운항 韓 화물선에 “외해 나가라”...軍, ‘출동 대기 태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이달 중순경 동해 공해상에서 정상 항로로 운항 중인 우리 국적 화물선에 “외해로 나가라”는 내용의 경고 통신 - 군과 정부 당국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화물선이 우리 수역으로 진입할 때까지 고도의 대북 감시와 대응 태세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짐.
	한·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국장급 협의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용준 동북아국장, 방한 중인 류진송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국장)과 한·중 국장급 협의 - 상호존중에 기반하여 성숙하고 건강한 한중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으며, 양측은 양자관계 및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
	한·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TO 사무총장 방한(5.22.~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방한하여 한국의 성장 경험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WTO 개혁 등 다자무역체제를 회복하기 위한 과제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논의 - 응고지 사무총장은 방한 기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예방해 글로벌 경제·통상·환경 변화와 WTO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총재 등 한국 정부 인사들을 잇달아 면담 - 한 총리-응고지 사무총장, 글로벌 경제·통상 환경변화와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무역과 환경·디지털·포용성 등 통상 분야 여러 현안에 대해 의견 교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2. (월)	한·E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정상회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유럽연합(EU) 지도부인 샤를 미셸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 [한·EU 공동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체결, 기후행동·환경보호·에너지 전환 등 포괄적인 기후·환경 분야 협력을 확대 - '한·EU 보건 비상 대비 대응에 대한 행정 약정'으로 보건 분야 협력 심화 - '한·EU 외교장관 전략대화'를 신설해 포괄적 안보 협력 강화 - "우리는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다시 한번 단호히 규탄한다" -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여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및 기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북한 내 인권 침해 및 인권 유린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한다" [공동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북한 핵·미사일 관련,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으며,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력" - "EU가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 등 일련의 입법이 양자 경제 협력에 제약을 가져오지 않도록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 "EU 최대의 연구지원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을 추진해 나아가기로 했다" - 미셸 상임의장, "EU는 핵무기를 절대로 용인하지 않을 것" -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EU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인정하지 않듯이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인정하지 않을 것"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푸아뉴기니와 DCA 체결(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링컨 국무장관, 파푸아뉴기니와 불법적인 다국적 해상 활동에 관한 방위협력협정(DCA)을 체결하고 협정 서명식에서 "우리는 역내 안보 파트너로서 함께 일하고 있다"고 강조 - 블링컨 장관은 태평양 지역 18개 섬나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대표들과의 만남에서 태평양 도서국과 두 번째 정상회의를 위해 올해 가을 워싱턴D.C.로 도서국 정상들을 공식 초청 • PIF 계기, 블링컨 국무장관과 뉴질랜드 총리 회담(파푸아뉴기니 포트모르즈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블링컨 국무장관, PIF에 참석한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와 회담하고 민주주의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기후변화 대응,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한 경제협력 강화를 논의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7 정상 히로시마비전에서 중국의 핵군축 의무를 언급한 것에 대해 "G7은 군비통제에 대해 다른 국가에 지시할 권리가 없음...중국은 방어적 핵전략과 핵무기를 선제사용 하지 않을 것을 맹세, 국가 안보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핵능력 유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유럽 12개국, 폴란드서 나토 동부전선 방위강화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폴란드 발트3국이 참여하는 북유럽그룹(Northern Group) 국방장관, 폴란드에서 회의를 열고, 동부전선 전쟁 억지력과 방위 강화 방안에 대해 협의 - 폴란드 국방장관, "협의의 초점은 북유럽 12개국에 안보를 보장할 방안을 조직화하는 데 맞춰졌다"면서 발트해를 건너 마주하는 영국, 스웨덴과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안전보장을 위한 공동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 - 이어 발트해 방위를 위해서는 폴란드와 스웨덴 간 협력 또한 중요하며 "우리는 발트해를 두고 마주 보는 이웃으로, 러시아 측으로부터 위협을 유사하게 감지하고 있다"고 설명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3. (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尹 대통령, “한·미·일 안보 공조 업그레이드, 첨단기술로 협력 확대할 것”(국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한민국의 정의롭고 책임 있는 리더십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고 있다”며 G7 정상회의 참석 성과 자평 - 히로시마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 “앞으로 3국 간 북핵의 핵·미사일에 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세 나라의 협력 의제도 자연스럽게 미래 첨단기술 분야로 확대되어 나갈 것” - “가장 시급한 문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차단하는 것”…“(G7과 초청국)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핵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북한의 불법 행동을 규탄” - “(한·일) 양국은 이제 미래로 함께 나아가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 - “핵심 광물 보유국인 캐나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호주를 비롯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인 일본, 독일과의 양자 회담으로 공급망을 좀 더 촘촘하고 안정적으로 다지는 계기가 됐다” - “한인 원폭 피해자들을 조만간 고국에 초청해 위로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백악관, 첫 핵우산 공동훈련(워싱턴D.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통령실과 백악관이 범정부 차원의 핵우산 운용 시뮬레이션(TTS) 훈련을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단계별 핵 도발 시나리오를 가정한 핵우산 대응 훈련을 양국 최상위 조직이 주도해 진행한 건 이번이 처음 - 해당 훈련에는 임기훈 대통령국방비서관이 수석대표로 참여 • 한·미 정부, 북한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을 위해 북한 개인·기관에 대한 대북 독자 제재 동시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정부, 북한 기관 3개와 개인 7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 - 제재대상 기관은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 동명기술무역회사, 금성학원이며, △북한 국방성·군수공업부 산하 조직으로서 해외 IT 인력 송출과 가상자산 플랫폼 개발 등 고수의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하였거나, △IT 분야 인력 양성에 관여함으로써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기여하였음. - 제재대상 개인은 김상만, 김기혁, 김성일, 전연근, 김효동, 유성혁, 윤성일이며, △북한 해외 IT 지부 책임자로서 불법 외화벌이를 주도하였거나,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외화벌이를 도움으로써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하였음. 특히, 이들 IT 지부 책임자들은 IT 인력에 대한 감시·통제·압박, 임금 미지급 등 강제노동을 강요하여 이들의 인권을 유린해왔음.
	한·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응고지 WTO 사무총장과 다자무역체제 복원 및 경제안보 제고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한 중인 응고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경제안보 제고 방안, △개도국의 다자무역체제 참여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27년 연속 북한을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무부, 북한을 미국의 테러 방지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재지정했다고 발표 - 연방 관보를 통해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 13637호에 따라 북한을 비롯해 쿠바,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을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전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나라로 결정했다고 공개 - 대테러 비협력국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충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를 지칭하며,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되면 미국에서 이들 국가로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위한 판매나 허가가 금지되고 국제사회에도 이 같은 사실이 공지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3. (화)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IT 관련 대북 추가 제재…개인 1명·4개 단체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북한의 국영 IT회사인 진영정보기술개발협조회사와 이 회사 총책임자인 김상만, 평양자동화대학, 110연구소, 정찰총국 산하 기술정찰국을 제재 명단에 추가한다고 발표 - 이번 조치는 북한 노동당과 연루된 단체와 기관을 제재하는 행정명령 13687과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북한 정권에 물품이나 서비스, 기술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한 행정명령 13810에 의거하여 실시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일본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양 방류의 대안을 충분히 탐색해야 함…국제사회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안전하다는 인상을 주려는 IAEA의 평가 및 검토 과정을 경계해야 함”
5. 24.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中 외교부장과 곧 만날 계획”…권영세 통일부 장관, “北 보트피플 가능성 대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진 외교부 장관, “새로 부임한 친강 외교부장을 곧 양국 간 협의를 거쳐 만날 계획” - 권영세 통일부 장관, 집단 보트 피플 사태 발생 대비 질의에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실제 대비하고 있다”고 답변 • 정부 ‘연락사무소 폭파’ 北 법적 조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당국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 - 北, 2020년 6월 16일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건물 폭파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IT 인력 활동 관련 한·미 공동 심포지엄(미국 샌프란시스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국무부와 한국 외교부, 해외 IT 인력 산업에서 북한의 제재 회피 차단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 개최 -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수천 명의 북한 IT 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며 “이들은 미국 기업에 의해 때때로 고용되기도 했다”고 발표 - 박 부대표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이들 기업 중 일부는 해킹까지 당해 장기적인 피해를 봤다”며 “이들은 아시아에서 중동, 아프리카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에 있다”면서 “이들이 버는 돈은 (일반) 북한 노동자보다 훨씬 많을 수 있지만, 그중 90%는 북한 정권에 징수된다”고 설명 - 이어 “유엔 추산에 따르면 이들 IT 인력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매년 5억 달러 이상 기여할 수 있다”고 부연 - 김 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최근 미국 법무부는 북한 IT 인력이 미국 시민으로 신분을 위장해 미국 기업에 취업한 사례를 적발했다”며 “이와 같은 일은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C 전략소통관, “중의 마이크론 제재 근거 없어…동맹과 함께 맞설 것”(전화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C전략소통조정관, 지난 21일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발표는 근거가 없다”며 “우리 미국의 입장을 전달하고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중국과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언급 - 이어 “중국의 조치는 경제적 강압에 맞선 G7이 취한 강력한 입장을 약화하려는 시도임이 분명하다”며 “이 발표는 (중국의) 강압적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와 그러한 조치 대응에 전념한, 경제 회복력과 안보에 대해 G7 정상들이 최초로 성명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라고 지적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 제2차 유라시아 경제포럼 개막식(화상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발전 구상, 글로벌 안보 구상, 글로벌 문명 구상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것…모든 국가가 평화와 보편적 안보, 공동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
	중·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총리 베이징 방문, 시진핑 주석 접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호 핵심이익을 지지하고, 다자영역에서 협력을 강화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5. (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생존 피해자 1명 대상 판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 해법(3.6. 발표)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생존 피해자 1명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5.26.(금))할 예정이라고 발표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한·미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년 이후 6년 만에 진행되는 훈련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역대 최대 규모(한·미 71개 부대 장병 2,500명 참가)로 실시...다음 달까지 총 다섯 차례 진행 - 우리 군 스텔스 전투기 F-35A, K-2 전차, 천무 등 다연장로켓포 투입, 주한미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등 610여 대의 장비 동원 - 이날 훈련은 북한 공격을 격퇴하고, 한·미 연합 전력을 총동원해 반격에 나서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진행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라오스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 회담 개최(일본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일본·라오스 국교수립 70주년을 향해 양국의 전략적 파트너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킬 것...안전보장분야에 대한 협력도 추진 - 日, 라오스에 대한 불발탄 제거를 위한 자금 및 공무원 연수 자금 등 무상지원 사업과 JICA를 통한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응자 등을 진행...경제사회 개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할 것 • 일본·스리랑카 정상회담 개최(제28회 닛케이포럼 계기, 일본 도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日, 포괄적 파트너십 발전 의지 전달 및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설명 - 지역 정세 및 군축·비확산 등 국제 문제에 대한 의견 교환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5.25.~26., 미국 디트로이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장국 미국의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의 주재 하에 '다자무역체제 강화', '지속 가능·포용적 성장을 위한 무역의 역할'을 의제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개최 - 아시아·태평양 역내 무역·투자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통상장관 간 회의체로서 안정적인 산업·에너지 공급망 관리,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등 대응이 시급한 통상 현안 등에 대해 논의 • 호주, 대북 독자제재 3년 추가 연장...개인 2명·기관 6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주 외무부, 페니 워그 외무장관이 12일 승인한 대북 독자제재 연장안을 공개하였으며, 2017년 첫 조치 이후 2020년에 연장했으며 이번이 세 번째 - 대북 독자제재 연장안은 23일 만료된 북한 개인 2명과 기관 6곳에 대한 제재 조치를 3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이 포함 - 제재 대상자는 베트남 소재 북한 해운회사 '마린 트랜스포트 오피스' 대표 김용수, 무기 제조 및 수출업체 '그린파인'의 중국 베이징 대표 림용환 등 2명과 기관으로는 베트남 소재 물류 회사 '선라이즈 트레이딩 앤 로지스틱스'와 '사이공 합작회사', 이집트 소재 무역회사 '에코개발투자회사', 북한 무기수출회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북한 해운회사 '손박무역회사', 말레이시아 군사 통신 장비 업체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등 6곳이 제재 대상
5. 26. (금)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부 차관 및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휴먼라이츠워치 신임 대표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웅 통일부 차관,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티라나 하싼 신임 대표 면담 - 김 차관은 국제사회에 북한인권 문제를 알리고 관심과 동참을 촉구해 온 휴먼라이츠워치에 사의를 표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6. (금)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티라나 하싼 신임 대표는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통일부의 적극적인 의지에 환영의 뜻을 밝히고,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되기를 기대하며, 북한인권 증진을 위해 통일부와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박용민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티라나 하싼 신임 대표와의 면담에서 우리 정부가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조를 견지하며 세계 각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유엔 등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 - 세계 인권 증진을 위한 휴먼라이츠워치의 협력과 북한 인권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O, 집행이사국으로 북한 등 선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제76차 세계보건총회 회의(스위스 제네바)에서 호주, 바베이도스, 카메룬, 코모로, 레소토, 카타르, 스위스, 토고, 우크라이나 등과 함께 WHO의 새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 북한은 1989년, 2000년, 2013년에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집행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검토 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
5. 27. (토)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납치피해자의 즉시·일거 귀국을 요구하는 국민대집회’ 개최, 기시다 총리 참석 및 연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치문제는 인권문제···북·일 평양선언에 기반하여 납치·핵·미사일 등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북·일 국교정상화 실천을 추구 - 납치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상 간의 대화가 중요···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할 결의가 되어 있음.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2023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그룹(WBG)이 공동 발표한 ‘2023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5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은 2022년 기준 전체 아동의 16.8%(28만 5천 명)로 추정 - 다만 발육부진을 겪고 있는 북한 아동 규모는 2012년 41만 1천여 명, 2020년 31만 7천여 명 등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5세 미만 아동의 ‘과체중’ 비율은 지난해 기준 2.8%(4만 7천여 명)로 2012년 1.6%(2만 5천여 명)에 비해 소폭 증가
5. 29. (월)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덕훈(내각 총리), 황해도, 개성시 농업부문 사업 현지요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천군, 연안군, 강령군, 옹진군, 장연군, 수안군, 토산군, 신계군 장풍군 등 방문 • 당 중앙위 제8기 제8차 전원회의 소집 결정서(5.28.) 주요 매체에 게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반기 국가행정기관 사업정형, 인민경제계획 수행실태 총화대책, 정책적 문제 토의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7일 일본의 기시다 수상의 조일 고위급 협의 진행 의사와 관련하여 “《전제조건 없는 수뇌회담》”이라고 말하지만 “해결된 납치 문제와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놓고 그 무슨 문제 해결을 운운하며 조일관계 개선의 전제조건”이라고 내세우고 있다고 비난 -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입장 •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격멸훈련 관련 비난 논평 발표(조선중앙통신사 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은 “목적이 매우 불순하며 위협적인 실동훈련이고 침략전쟁 시연회”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5.29.~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번영을 향한 항해: 푸른 태평양 협력 강화’를 주제로 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 회의 개최···18개 회원국 중 12개국 정상 참여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9. (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선언: 회복력 있는 태평양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파트너십' 채택 및 '자유, 평화, 번영의 태평양을 위한 행동계획' 발표 - 선언문에는 △한국의 태평양도서국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2027년까지 3,990만 달러(약 530억 원)로 2배 증액하는 방안 모색,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정, 기술 이전,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강화, △한국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대한 태평양도서국의 환영 의사, △2024~202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선거 등 국제기구 선거에서 한국의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 반영 - 행동계획에는 한국의 기후변화 협력 지원, 친환경 에너지 공급, 감염병 방역 시스템 컨설팅 등 환경, 보건, 디지털 분야에서의 지원 방안을 총망라 -尹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10개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 진행 • 박진 외교부 장관, 한·파푸아뉴기니 외교장관 약식 회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파푸아뉴기니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사증면제 협정(약칭)'에 서명 - 동 협정을 통해 양국 간 인적 교류가 더욱 수월해짐으로써 양국 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 기대 • 北 위성발사계획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및 외교부 대변인 성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태웅 안보실장 주재로 개최,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통보 관련 대응 방안 논의 - 이에 관한 정부 입장은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발표 <p>[외교부 대변인 성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공개한 5월 31일부터 6월 11일간 '위성 발사 계획' 관련,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며, 어떠한 구실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명백한 불법 행위" - "우리 정부는 북한이 역대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을 예고한 것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불법적 발사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북한이 끝내 발사를 강행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고통을 감수해야 할 것" - "우리 정부는 긴밀한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의 WHO 집행이사국 진출 관련 외교부 및 보건복지부 대변인 논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76차 세계보건총회에서 북한이 세계보건기구(WHO) 집행이사국으로 선출된 데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 -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유엔의 권위를 무시해 온 북한이 과연 유엔이 지향하는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한 기여를 해야 하는 WHO 집행이사국으로서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의문시되는 바"
	한·미·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유선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공개한 '위성 발사 계획' 관련, 김 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북핵수석대표 3자 유선협의 - 3국 수석대표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불법행위임을 지적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강조 -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이 역대 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 발사를 자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북한이 끝내 불법적 도발을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하기로 협의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위성발사계획 관련 총리 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및 한국 등 관계국과 연계하여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강력히 자제를 요구 - 국민에 대한 적절한 정보 제공...예측불가능한 사태에 대비해 만전의 태세를 갖추 것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29. (월)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츠노 관방장관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성·자위대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 하달, 오키나와현에 PAC-3 부대 및 이지함 전개 등의 준비 시행 - 북한이 '위성'이라 칭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것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도발행동 • (5월 30일) 하야시 외무상 기자회견, "북한이 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떠한 발사도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북한-대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병철(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미국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경고입장 발표(5.29.) 보도 (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합 합동 화력 격멸훈련은 "지역 정세에 매우 위험한 후폭풍과 역류를 몰아올 수 있는 폭발 잠재력 내포" - 때문에 당 제8차대회와 6차례 당중앙위 전원회의는 "무력 앞에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고 정당 방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하였고,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
5. 30. (화)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개막(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체인 확산방지구상(PSI) 설립 20주년 기념 고위급 회의 개최(5.30.~6.2.) -尹 대통령, 영상 메시지에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으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계속 조달하고 있다"며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우리의 협력은 더욱 굳건해져야 한다"고 강조 - "PSI 역량을 강화하고 신형 기술과 새로운 확산 관행의 부상이 야기한 영향과 변화하는 안보환경 등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행동계획'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공동성명 채택 - 이날 채택된 공동성명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등 진화하는 WMD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협력의 필요성" 및 "PSI가 암호화폐를 동반한 확산 금융, 무형 기술 이전, 확산 행위자의 국제법 우회 기법 발달 등 새로운 확산 관행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 강조 • 뉴질랜드와의 외교장관회담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국 관계, △태평양 지역 협력, △경제·통상, 과학·기술, 방산 등 실질협력, △한반도 및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 - 양 장관은 한·뉴질랜드 FTA가 양국 간 무역 확대 및 경제협력 관계 증진의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핵심·신형 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디지털 통상,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 협의 - 양 장관은 한반도 정세 등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특히 박 장관이 최근 북한 관련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한 데 대해, 마후타 장관은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한·미·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한·미·몽 국장급 회의 개최(몽골 울란바타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용준 동북아시아국장, 제1차 「한·미·몽 국장급 회의」에 참석 - 한반도 문제 등 지역 및 국제정세 관련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핵심광물, 기후변화,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30. (화)	한·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6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영호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 카이후 아츠시 일본 외무성 군축불확산과학부장과 제16차 한·일 군축비확산협의회를 개최 - 양측은 국제 군축비확산 체제 내 도전 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핵군축·비확산 △수출통제 등에 있어 양·다자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 - 양측은 핵비확산조약(NPT), 유엔총회 1위원회, 확산방지구상(PSI) 등 양·다자 차원의 비확산 및 반확산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 양측은 북핵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였으며, 북한이 공개한 '위성발사계획'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북한이 이러한 불법적 발사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
	북한-대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발표(조선중앙통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31일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예정되었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행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 "정상비행하던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하여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조선서해에 추락" 발표 • 평양 대평지구 새집들이 진행
5. 31. (수)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참, "北, '군사 정찰위성' 주장 발사체 1발 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6시 29분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발사하였으나 예고된 낙하 지점에 도달하지 못하고 추락 - 발사체는 전북 군산 어청도 서쪽 200여km 서해상에 떨어졌으며, 군은 발사체 일부로 추정되는 물체 인양 -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개최 "이번 발사는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심각한 도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임을 강조하고 규탄"…"북한의 추가 발사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동맹 및 우방국과 공조 태세를 유지" - 국정원, "김정은 위원장, 현지에서 참관한 것으로 추정"…"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 가량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조금하게 (발사를) 감행한 것도 (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국회 정보위 보고) • 박진 외교부 장관, 카자흐스탄 외교장관회담 및 에너지부 장관 면담(카자흐스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장관회담에서 △양국 관계 발전 △한·카 실질 협력 증진 방안, △지역 및 국제정세, △국제무대 협력에 대해 폭넓게 협의하였으며 외교장관 회담 직후 양 장관은 한·카자흐스탄 외교부 간 2023-2024년 협력 양해각서(MOU)에 서명 - 에너지부 장관 면담에서 교역·투자, 에너지, 원전, 인프라, 주요 광물 공급망 등 양국 경제 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
	한·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2차관, 美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보니 젠킨스 美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을 면담하고,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회의 결과 평가, △군축·비확산 분야 한·미 협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 교환 -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 및 비확산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국제 비확산체제를 훼손하고 있는 만큼, 북한을 포함한 확산 우려자들의 행동을 억지할 수 있도록 PSI 등을 통한 반확산 분야 양국 간 협력을 더욱더 심화해 나가기로 협의 - 북한의 위성 명목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5.31.)에 대한 대응 방안을 포함, 북핵 억제를 위한 한·미 간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함.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31. (수)	한·미·일·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일·호주, 해상 연합 훈련(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 회원국들의 차단 훈련 - '이스트 엔데버 23' 명칭의 훈련으로, WMD 관련 물자를 신고 있는 선박을 포착해 멈춰세운 뒤 의심 물자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진행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악관, '北 발사 강력 규탄...도발 즉각 중단·대화 복귀해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C 성명을 통해 "미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는 뻔뻔한 복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역내 및 이를 넘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안보 저해 행위"라고 비판 - 이오 백악관은 "위성으로 주장하는 이 발사는 직접적으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과 연관돼 있는 기술을 포함했다"며 "모든 나라들이 이번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진지한 협상을 위한 테이블에 돌아올 것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며 "외교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즉각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관여를 선택해야 한다"고 경고 • 국방부 장관,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 시작, 일본 방문(5.31.~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부, "오스틴 장관의 7번째 인도·태평양 지역 순방은 미 국방부가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평화와 안정, 역지를 위해 미국의 동맹, 파트너들과 어느 때보다 많은 일을 하는 가운데 이뤄졌다"고 발표 - 오스틴 장관, 일본 도착 사실을 알리며 "나는 미·일 동맹 강화의 역사적인 진전을 강조 하고자 여기에 왔다"며 "우리는 더 굳건하고 안전한 미래를 위해 성과를 내고 있고,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언급 • NSC 전략소통조정관, '北 위성 발사'에 '계속해서 김정은에 책임 물을 것'(정례브리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 커비 NSC 전략소통조정관, "중요한 우려 사항은 (북한이) 발사할 때마다 그것이 실패하든 성공하든 김정은과 그의 과학자, 엔지니어들은 배우고 개선하면서 적응한다는 것"이라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군사적 능력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 - 이어 "이것이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역내에 적절한 군사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는 이유"라고 설명 - 커비 조정관은 '북한 위성 발사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어떤 구성 요소를 촉발했느냐'는 질문에 "북한이 이번 발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미 (NCG 합의) 있었다"면서 "다만 워싱턴 선언과 NCG는 분명히 수개월에 걸친 북한의 계속된 도발의 결과로 생긴 것"이라고 답변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부 대변인, 북한의 '발사체'에 대해 "한반도가 어떻게 현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는가는 명확하며, 현 상황은 중국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님...현 상황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듀얼트랙'으로 의미있는 대화를 재시작하여, 각자의 우려를 균형있는 방법으로 논의 해야 함"(정례브리핑)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츠노 관방장관 기자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 탄도미사일의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1발 발사...북한이 예고한 기간 내에, 예고한 방향으로 발사하였으나, 서해 상에서 소실되어 우주공간에 어떠한 물체가 투입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 세부사항은 현재 분석 중 -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며, 강하게 비난함. 	

일자	구분	주요 내용
5. 31. (수)	U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사무총장, “北 군사위성 발사 강력 규탄…안보리 결의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 - 뒤자리크 대변인,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어떠한 발사도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번 발사가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 - 이어 뒤자리크 대변인은 “사무총장은 북한에 이런 행위를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평화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를 신속히 재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부연 • IMO, 북한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문 사상 첫 채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 영국 런던 IMO 본부에서 열린 제107차 회의에서 국제 항행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규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 회원국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며, 미사일 발사 시 적절한 사전 통보를 하지 않아서 선원들과 국제 해운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고 비판 - IMO 해사안전위는 1998년, 2006년, 2016년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결정회람문을 채택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TO·EU·프랑스 “北 탄도미사일 기술 활용한 발사 강력 규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발사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발표하고 “이는 역내 및 그 외 지역의 안보에 긴장을 고조하고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면서 “다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 위반”이라고 비판 - EU 외교부 격인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탄도 군사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철저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 무시는 국제 및 역내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비판 - EEAS는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이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 (북한의) 그러한 행위가 절대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 - 프랑스 외교부도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시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

II

북한 매체 주요 보도

1. 대 내

■ 김정은, 정찰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 현지도(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5.17.)

- 노동신문 5월 17일자 1면은 전날 김정은 위원장이 비상설 위성발사 준비위원회 사업을 현지도하는 기사를 사진과 함께 게재함.
 - 김 위원장은 “총조립 상태와 우주환경 시험을 최종적으로 마치고 탑재준비가 완료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보았고, 성공적 발사는 “국가의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절박한 요구이며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방력 강화정책의 정확한 실천과정인 동시에 나라의 우주군사 및 과학기술 개발에서 뚜렷한 진일보”라고 평가
 - 또한 군사정찰위성 보유의 전략적 성격에 대해 강조하며 “미제와 남조선괴뢰 악당들의 반공화국 대결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정당 방위권은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 것”이라고 천명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함.

■ 국가우주개발국,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발표(조선중앙통신, 2023.5.31.)

- 조선중앙통신은 5월 31일 국가우주개발국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및 추락 사실을 발표함.
 - 국가우주개발국은 5월 31일 오전 6시 27분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군사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운반 발사체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발사
 - 《천리마-1》형은 정상비행 중 1계단 분리 후 2계단 발동기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
 - 국가우주개발국 대변인은 《천리마-1》형에 도입된 신형 발동기 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용된 연료의 특성이 불안정한 데 사고의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원인 해명에 착수한다고 설명
 - 국가우주개발국은 위성 발사에서 나타난 결함을 조사하고 극복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며, 여러 시험을 거쳐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제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발표

2. 대 외

■ 김정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 전승절 관련 축전 발송(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 2023.5.10.)

- 노동신문은 5월 10일자 1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러시아 전승절 관련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전날 발송한 축전 내용을 보도함.
 - 김정은 위원장은 러시아 인민이 “무비의 영웅주의와 희생성을 발휘하여 인류의 운명을 위협하던 파시즘을 격멸하는 정의의 대전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 하였다고 기술
 - 또한 푸틴 대통령에게 “강인하고 정의로운 로씨야 인민이 당신의 령도 밑에 적대 세력들로부터 가해지는 온갖 도전과 위협을 짓부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 지역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려정에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하리라고 확신” 한다고 인사
 -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맞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과감히 나선 러시아 군대와 인민에게 “다시 한 번 뜨거운 전투적 인사를 보내는 바”라고 강조

■ 박상길 외무성 부상 담화(조선중앙통신, 2023.5.29.)

- 조선중앙통신은 5월 29일 박상길 외무성 부상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 발언에 대해 발표한 담화를 게재함.
 - 기시다 총리는 27일 북·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힘.
 - 박 부상은 일본은 전제조건 없는 회담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다 해결된 랍치 문제와 우리 국가의 자위권”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기 때문에 “지나간 과거를 한사코 붙들고 있어가지고는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없”다고 발언함.
 - 또한 “국제적 흐름과 시대에 걸맞게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대국적 자세에서 새로운 결단을 내리고 관계 개선의 출로를 모색하려 한다면 조일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공화국 정부의 립장”이며 “말이 아니라 실천 행동으로 문제해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함.

■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자위력 강화입장 발표(조선중앙통신, 2023.5.30.)

- 조선중앙통신은 5월 30일 리병철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 한미연합합동 화력격멸 훈련과 관련하여 자위력 강화입장을 발표한 기사를 게재함.
 - 통신은 4월의 워싱턴 선언에 의해 미 해군 전략핵잠수함이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며, 각종 공중 정찰수단을 집중 동원하여 정탐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적들의 반공화국 침략 군사행동 준비상태를 여실히 실증”한다고 주장
 - 이에 당 제8차대회와 이후 진행된 6번의 당중앙위 전원회의는 “우리 무력 앞에 절박한 과업을 제시하고 정당방위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명령”하였고, 6월에 발사할 군사정찰 위성 1호기와 시험할 예정인 정찰 수단이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발언
 - 그리고 “정찰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으며 그 발전계획들을 실행해나갈 시간표”를 가지고 있으며 포괄적이고 실용적인 전쟁억제력 강화 활동을 행동할 것이라고 피력